

SmartWhistle

윤리경영 Newsletter 2017년 11월호

1. 최근 동향 및 소식

-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움직임 확산.. 상장사 대응책 마련 나서야"
- 공정위가 내부고발자에게 준 포상금 중 최고는 4억8천만 원
- '리베이트 원천 차단'...계약업계 '반부패경영시스템' 도입
- 채용비리와의 전쟁 포문 연 文정부...내부고발자 보호해야'

2. 윤리경영 실천 사례

- [삼천리]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 내 윤리풍토형성에 미치는 영향

3. 청렴 위반 사례

- 직위명을 이용한 화환선물
- 학회 회의 출장비의 청탁금지법 신고 대상 여부

4. 지식마당

- 자본주의 5.0

5. Quiz

6. 관련 행사 및 독자 의견



최근 동향 및 소식

1.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움직임 확산.. 상장사 대응책 마련 나서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예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규정 강화와 관련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여기에 사외이사, 준법감사인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운영중인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경영진을 포함한 전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장회사협의회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는 지난 9월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상향 법안 통과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운영실무 설명회를 진행했다. 법안 통과로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2019년부터 우선 적용되고 5,000억원 이상은 2020년, 1,000억원 이상은 2022년부터 적용된 뒤, 2023년부터는 전체 상장사가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따르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보고서에 대한 감사인 인증수준이 기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된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를 대표이사가 직접 이사회, 감사 및 주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특히 내부회계 담당이사와 직원을 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에서 별도 등록하고 관리토록 했다. 이를 통해 담당자 책임성 및 교육 등을 통한 역량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내부통제 인증 강화로 감사인의 감사절차가 확대되고 감사의 질 향상 및 감리·소송 리스크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모범규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이해 부족, 소유와 경영의 분리 미흡 등 우리나라 특성상 감사의견이 바뀌는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컨대 앞으로는 과정의 적정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재무제표가 적정해도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차원에서의 준법경영시스템 개선 작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사외이사, 준법감사인 등 : '기업의 준법경영시스템 실효성 제고'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http://www.fnnews.com/news/201711021700280642>

2. 공정위가 내부고발자에게 준 포상금 중 최고는 4억8천만 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급한 역대 최대 포상금은 4억 8,585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포상금 지급액 수 상위 10건'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급액 담합 등 6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1억 원이 넘는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 '민간건설공사 입찰 담합사건에서 물량배분합의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한 내부고발자에게 가장 많은 포상금인 4억8,585만 원을 지급했다.



포상금은 일반시민이나 내부고발자의 적극적인 범위 반행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뤄지거나 증거확보가 쉽지 않은 담합, 부당지원 등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61335

최근 동향 및 소식

3. '리베이트 원천 차단'...계약업계 '반부패경영시스템' 도입

계약업계가 리베이트 원천 차단을 통해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 시스템인 'ISO37001(반부패경영시스템)'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12월 유한양행, 녹십자, 한미약품 등 상위 제약사를 중심으로 1차 시스템 도입이 된다. 오는 2019년까지 반부패경영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제약사는 50여곳 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단은 7일 협회 회의를 통해 의약품 투명성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회는 ISO37001 도입과 관련해 자율준수관리분과위원회가 제안한 일정과 참여기업 등을 확정해 반부패경영시스템이 차질없이 도입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ISO37001은 국제표준기구의 뇌물방지경영시스템으로 모든 조직 활동에서 발생하는 뇌물수수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인증기관은 기업의 리베이트와 같은 경영이슈 등을 미리 점검한 뒤 이상이 없을 때만 인증을 한다. 즉 리베이트와 같은 불법행위가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는 셈이다.

이런 점 때문에 ISO37001은 기업뿐 아니라 규제기관, 정부, 국제기구들도 사용하는 경영 툴(도구) 중 하나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해 사용 중인 윤리경영의 국제 표준이기도 하다. 특히 이 인증제도는 조직이 기소되거나 조사받을 때 방어를 위한 '확고한 증거'로 내밀 수 있다.

협회는 우선 1차로 오는 12월부터 내년 5월 9개 제약사가 ISO37001을 도입하고 인증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계약업계 관계자는 "ISO37001이라는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패경영과 같은 불씨를 원천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계약업계의 영원한 숙제인 리베이트 문제가 해결될 업계는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109000086>

4. 채용비리와의 전쟁 포문 연 文 정부...'내부고발자 보호해야'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척결에 칼을 빼 들었다. 최근 일부 공공기관의 인사·채용비리가 드러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경찰의 수사력까지 동원해 특별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의 구조적 채용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기면서도 내부고발 등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내부 구성원의 제보를 잘 이끌어간다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인사관행이 바뀌면 자연스레 민간영역도 따라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조직 내부의 감시 시스템과 내부고발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아무리 경찰 단속이 시행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20048616121784&mediaCodeNo=257&OutLnkChk=Y

윤리경영 실천 사례

[삼천리]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 내 윤리풍토형성에 미치는 영향

삼천리 그룹은 한국 전쟁 직후인 1955년 “삼천리 연탄기업사”라는 기업명으로 창립한 한국의 대표적 에너지 기업이다. 창립 당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서민들의 주요 에너지원이었던 연탄 사업을 시작으로 1982년 도시가스 사업에 진출하여, 현재는 친환경, 에너지, 생활문화의 세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삼천리는 창업 이후 60년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상장 이후 연속 배당이라는 건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한 건실한 기업이다. 삼천리 그룹의 인상적인 성과 중 하나는 60년간 노사분규가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를하여 “2無”, “적자 경영”과 “노사분규”가 창사 이래 한 차례도 없었던 성과는 여타 기업들과는 차별되는 삼천리 그룹의 독특한 성과임에 틀림 없다.

1. 삼천리의 창업자 정신과 윤리적 리더십 모델링 효과

삼천리 그룹은 타 기업들과는 달리 창업주부터 공동 경영이라는 독특한 방식의 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1955년 삼천리연탄기업사를 창업할 당시부터 이루어진 동업체제는 2세 경영 체제인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동업 관계는 삼천리 기업의 조직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하는 경영자들 간의 동업 관계는 경영자와 직원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창업 이래 분규가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은 화합의 노사문화를 창출하는 기반이 되었다.

공동 창업자인 이장균 회장과 유성연 회장은 “어느 한쪽이라도 반대하는 사업은 절대 손을 대지 않는다는 동업 원칙”, “일단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론을 하지 않는다. 아무리 반대를 했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이익이 나도 똑같이, 손해가 나도 똑같이 나눈다.”는 내용을 언급할 정도로 두 경영자의

“신의”를 기반으로 삼천리의 경영원칙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창업주의 윤리적 리더십의 모델링 효과의 가장 직접적인 사례는 바로 두 창업주의 2세대인 이만득 회장과 유상덕 회장의 동업 관계이다. 현재 이만득 회장이 삼천리를, 유상덕 회장이 삼탄을 각각 책임지고 경영하고 있는 현 체제에서도 두 경영자들은 창업주 정신을 계승하여 그룹 전체의 중요한 사안을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모든 계열사의 지분을 동일하게 2분의 1씩 소유하고 있다. 이는 조직 내 최고 권위를 지닌 최고경영자의 행동이 조직 구성원들 전체에게 역할 모범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 풍토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선행요인이다.

2. 윤리적 가치의 내면화와 윤리적 선진단계로의 도약

창업주 이장균 회장은 “우리 모두는 빛을 벗으면서, 빛을 지우면서, 남의 것을 얻어오면서, 남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라는 인생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많은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하지만 삼천리의 사회공헌활동은 창업자의 가치에 기반하여 조직문화로 내재화되었다는 점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깨닫고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대응단계”에서 더 나아간 “윤리적 선진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명확한 윤리관을 가지고 윤리원칙에 따라 경영활동을 수행하며, 단기적인 이익의 실현보다는 윤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윤리경영의 최고 수준 형태를 이룬다.

삼천리의 경영원칙을 살펴보면 경영 현장의 다양한 측면들에서 윤리적 가치를 투영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ISO 26000에서 권고하고 있는 7가지 주제인 기업의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 관행, 소비자 이슈 및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윤리경영 실천 사례

삼천리의 경영원칙은 3道9經로 기업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경영 수행 시 의사결정에 있어서 근본으로 고려해야 할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윤리적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삼천리 그룹은 다양한 측면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즐거운 경영	준비된 경영	함께하는 경영
3道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원 업무몰입을 통한 주인 의식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한 상생
9經	① 가정애, 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가정 조화 직장 내 자아성취 	④ 안전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환경 친환경 사업 환경생태계 기여 	⑦ 기업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리원칙에 따른 의사결정 현금흐름과 리스크 관리 투명 정보공시
	② 자율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한과 책임 위양 리더십 증진 	⑤ 인재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인재 육성 동기부여 및 교육제공 역량-직무 적합성 	⑧ 고객감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 만족을 위한 제품 서비스 제공
	③ 열린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평문화구축 커뮤니케이션 증진 지식공유 및 개방 	⑥ 창조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변화 추구 창의적 업무수행 	⑨ 나눔상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생적 기업생태계 조성 지역사회 문제 동참 공유가치 창출

<삼천리 경영원칙 3道9經>

3. 삼천리의 윤리경영 실천 성과

60년 노사 무분규

삼천리 그룹은 창사 이래 노사분규가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경영자와 노조가 상호 신뢰의 동반자 관계로 서로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이다. 이는 경영자들 간의 신의 뿐만 아니라 경영자와 직원들 간의 신의를 지키는데 있어서도 원동력이 되며, 정기적으로 노사 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당면한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

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쌍방향 소통은 조직 외부의 협력업체나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 협력업체와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고, 고객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안전경영의 핵심원칙으로서 윤리경영 실천

삼천리 그룹에서는 클린센터를 운영하여 선물을 받았을 때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협력업체로부터 절대 접대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윤리경영을 모든 제도와 교육에 포함시켜 종업원들의 의식 속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이러한 삼천리의 윤리경영에 대한 의식화 노력은 이만득 회장의 개인적 체험에서 비롯되었다. 명절에 들어온 선물을 두고 이만득 회장의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가 회장이니 선물이 들어오는 것이 당연하지’ 라고 말하는 대화를 듣고, 별 생각 없이 관행처럼 받아들이는 일이 아이들에게는 독으로 자라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안전사고에 있어 무심결에 안전 규칙을 무시하는 행동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데, 이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임직원이 윤리원칙을 무시하는 것을 허용하였을 때 결국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윤리경영의 원칙을 임직원으로 하여금 내재화 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삼천리 그룹의 사회공헌 활동

삼천리 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은 창업주 때부터 강조하여 뿌리내린 가정애와 직장애를 바탕으로 직원들을 배려하는 정신의 확장이라 할 수 있다. 1977년 전 직원의 고등학교, 대학교 학자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여기고 그 자식들의 교육을 지원한 것이며, 이는 후대 경영자들이 세운 “천만장학회”로 계승되어 외부 사회공헌 활동으로 제도화되었다.

김보영, 삼천리 그룹 윤리경영 사례, 2016

청렴 위반 사례

1 직위명을 이용한 화환선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A는 업무상 전혀 관계가 없는 동문의 결혼식에 사비로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선물하였다. 다만, 화환에 기관명과 직위를 포함하여 발송하였다.

- 내용 : ○○○기관장님, ○○○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시사점 :

- ①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 금지에 대한 주체는 공직자 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인 등에 대한 화환 등의 제공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
- ② 화환을 제공받는 분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까지의 금품 제공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음
- ③ 다만, 기관 차원에서 화환 등을 보내고 사비로 동일 명의로 화환을 보내는 등의 특수한 경우라면 동일인이 보낸 것으로 평가되어 가액이 합산될 수 있음
- ④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2의 ‘직위의 사적 사용 금지’에 따라 저촉될 수 있음

2 학회 회의 출장비의 청탁금지법 신고 대상 여부

부산에 소재한 대학교수 A씨는 B학회의 편집위원으로 서울에서 진행되는 학회 회의에 참석하였다. 회의 참석에 대한 사례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교통비 10만원을 수령하였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대학 내부적으로 외부강의 또는 회의의 명목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시사점 :

- ① 학회에서 수행한 회의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의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하며, 외부강의 등에 대한 요청 명세를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사례금을 제공받지 않더라도 법 상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여야 함
- ②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 시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의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외부강의 등에 의한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지식마당

자본주의 5.0

자본주의 5.0은 자본주의 2.0에 해당하는 CSR을 한 단계 발전시킨 개념으로 CSV, 즉 공유가치창조를 말하며 시장과 정부, 기업과 사회가 균형된 시장으로 서로에게 접근하는 모델이다.

1. 자본주의 시대의 변화

자본주의는 1776년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가 저술한 국부론을 시발점으로 지속적으로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지난 250여 년 간 네 차례의 변화를 통해 사회에 적응하면서 정치, 문화,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이 네 번의 변화에 의해 나타난 다섯 가지 모습을 자본주의 1.0부터 5.0까지로 구분한다.

구분	시기	특징
자본주의 1.0	18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방임주의 시장지배 자유주의
자본주의 2.0	1930년대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자본주의 정부의 개입
자본주의 3.0	1980년대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자유주의 주주이익의 극대화
자본주의 4.0	2008년대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따뜻한 자본주의 사회복지 추구
자본주의 5.0	2011년대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가치창조 경제가치+사회가치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

자본주의 1.0 - 18세기 자유방임

당시 자본주의는 자유방임(laissez-faire), 즉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작동되는 시장이 우리가 가진 제한된 자원을 배분하여 최선의 성과를 가져온다는 믿음을 전제로 하여 정부간섭을 일체 배제하는 원칙을 고수했다.

자본주의 2.0 - 1930년대 정부의 개입

이 당시 영국은 세계경제에서 주도권을 상실했고, 미국은 불황에 빠진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 정부개입 정책을 채택했다.

대표적인 정책이 1933년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루즈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1882~1945)에 의한 뉴딜(New Deal) 정책이었고, 미국 전역에서 대형 인프라를 건설하는 공공사업이 시작되었다.

자본주의 3.0 - 1970년대 주주이익의 극대화

1980년대 두 번째 시기에서 정부 관료들이 민간부문의 자율적 기능을 침해하면서 재정적자를 비롯하여 물가상승, 실업을 증가라는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한 데 대한 국민들의 분노로 나타났다. 이 시대 지도자들은 통화량에 대한 조정을 통해 경제안정과 완전고용을 추구하는 통화주의를 채택해 정부 개입을 지양하고 시장 역할을 복원하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소득세 인하, 공기업 민영화, 노조에 대한 강력한 대처 등을 통해 시장메커니즘을 복원했다. 하지만 1980년대에 개발된 인터넷을 기반으로 시작된 IT산업이 정보 혁명을 일으켰고, 인터넷이 촉발한 디지털화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즉 디지털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실업자로 내몰았고, 세계화는 여기 참여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을 몰락시켰다.

자본주의 4.0 - 사회복지 추구

자본주의 3.0이 균형과 절제라는 덕목을 잃어버리고 조화를 포기하면서 배태되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엔론(Enron) 사태를 비롯한 일부 대기업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례들이 속속 발견되면서 그 동안 경제를 이끌어왔던 가진 자들에 대한 비판이 2011년 '월스트리트 점령'이라는 파괴적 행동으로까지 나타났다. 사회는 대기업이 마지못해 동냥같이 제공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다. 일반 대중을 근간으로 한 대중 자본주의(mass capitalism)적인 자본주의 4.0 운동은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개발되지 못한 채 73일 만에 끝났다.

지식마당

자본주의 5.0 - 공유가치창출

사회적 전환기에 나타난 새로운 움직임이 포터 (Michael E. Porter: 1947~)와 크레이머(Mark Kramer)가 주창한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이다(Porter & Kramer, 2011). 이 운동의 핵심가치는 “기업의 가치와 기업이 속한 사회의 가치를 동시에 증진”하자는 것이고, 이 운동의 기본전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업기회 중에는 반드시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대안이 있게 마련”이라는 믿음이다. 드러커 (Peter F. Drucker: 1909~2005)는 자본주의 변형이 논의되기도 전인 1970년대에 인간중심 자본주의라는 이상사회를 제시하면서 “오늘날 사회적이고 세계적인 모든 이슈는 숨겨진 사업기회이다.” 라는 표현으로 CSV의 도래를 예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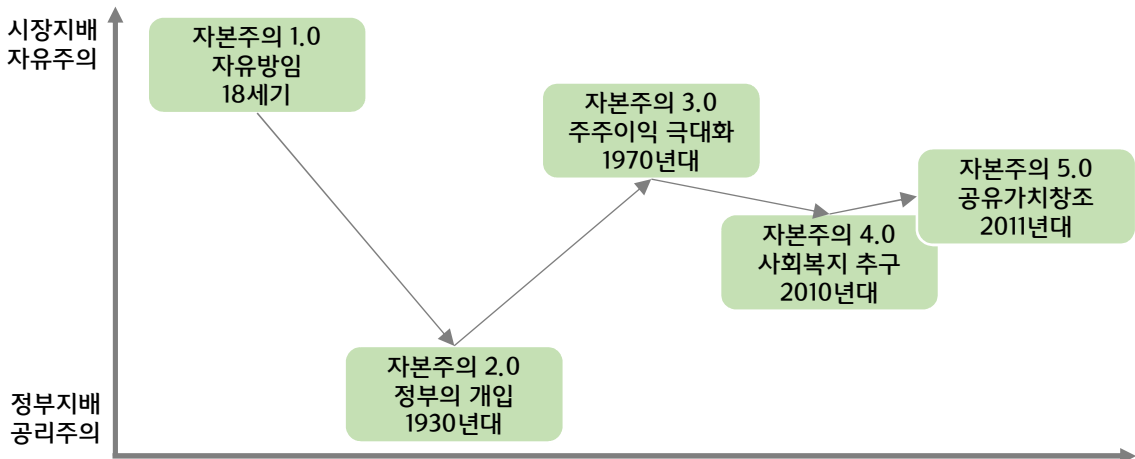
2. 자본주의 5.0 시대와 CSV

자본주의 5.0은 자본주의 3.0과 자본주의 4.0을 조화롭게 융합하는 가운데에서 나왔지만, 그 내용인 공유가치창출, 즉 CSV는 자본주의 2.0에 해당하는 CSR,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다. CSR과 CSV를 여섯 가지 기준에 따라 비교해 보면 첫째, 가치에 있어 CSR은 생산, 판매와 같은 전통적인 기업고유 활동과 별개로 진행되는 선행인데

반해, CSV는 투입비용에 대비해서 사회경제적 가치가 높은 기업 고유의 활동이다. 둘째, 활동내용에 있어, CSR은 시민의식을 전제로 한 자선활동인데 반해, CSV는 기업과 공동체 모두를 위한 가치창조 활동이다. 셋째, 사회적인 인식에 있어 CSR은 이윤 극대화 와 관계없는 활동으로 인식되는데 반해, CSV는 이윤극대화를 위한 필수요소로 인식된다. 넷째, 예산에 있어 CSR은 가장 적극적인 기업의 경우에도 매출액 대비 1% 남짓한 CSR예산으로 운영되는데 반해, CSV는 기업 전체 매출액 100%에 CSV개념을 반영할 수 있다. 다섯째, 진정성에 있어 CSR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회사가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에서도 다소 냉소적인 입장을 보이게 되는 반면, CSV는 사회 가치 창조활동이 고유사업에 녹아있으므로 사회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 여섯째, 지속성에 있어, 이익의 일부를 떼어내어 진행하는 CSR은 기업 손실이 발생하는 순간 모든 활동이 중단 될 수밖에 없으나, CSV는 이익 손실에 관계없이 진행되는 활동이다.

따라서 CSV는 사회적 발전과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래서 사회와 기업이 공유하는 가치는 기업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조동성(2012), “자본주의 5.0 시대의 경제민주화”, 한국전문경영인학회.



Quiz

1. 다음 중 자본주의 1.0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작동된다고 믿었다.
 - ② 17세기 전 초기 자본주의를 일컫는다.
 - ③ 정부간섭이 일부 필요하다고 믿었다.
 - ④ 자원균등배분에 중점을 두었다.

2. 다음 중 자본주의 2.0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정부간섭을 일체 배제하는 원칙을 고수했다.
 - ② 불황에 빠진 미국경제를 부흥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③ 물가상승, 실업률이라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 ④ 엔론 사태가 발생하였다.

3. 다음 중 자본주의 4.0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정부관료들의 민간부분의 자율적 기능 침해가 문제가 되었다.
 - ② 재정적자가 문제가 심각하였다.
 - ③ 경제를 이끌어왔던 소수의 대기업에 대한 비판은 월스트리트 점령사태까지 발발하게 하였다.
 - ④ 포터와 크레이머가 주장한 공유가치창조라는 새로운 움직임이 생겼다

4. 다음 중 자본주의 5.0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사회복지 추구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 ②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다.
 - ③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개발되지 못해 73일만에 끝나버렸다.
 - ④ 기업의 가치와 기업이 속한 사회의 가치를 동시에 증진하자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과월호 Quiz 정답 및 해설

1. 답 ④ 사막화는 유목민들이 기르는 가축이 이동하며 모든 풀을 먹어 치웠기 때문이다
2. 답 ③ UNFCC - 1,000억 달러
3. 답 ② 유목민들이 기르는 가축 개체 수를 줄이기
4. 답 ① Coast, Morocco - Marrakech Partnership

관련 행사

1. 권익위, 15일 아·태 반부패 컨퍼런스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한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해 나선다. 권익위는 오는 15일부터 서울 간 서울 중구의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아·태 반부패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15일 개회식에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클레어 위 ADB 청렴사무소장 등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UN 지속가능개발 2030 아젠다 실현을 위한 청렴 전략', '아태지역 민관 합동 청렴정책 추진 방안' 등을 주제로 패널 토론과 그룹토의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114_0000147128&clD=10301&plD=10300

2. 성장현 용산구청장,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 수상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15일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2017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을 받았다.



독자 의견

본 뉴스레터와 관련된 건의 및 개선사항이 있으시다면, 메일(advisor@jcons.co.kr)로 의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부패 청렴대상은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행정·사회문화 확립을 통해 국가와 정치발전에 기여한 정치인, 공직자, 기업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반부패정책학회에서 주관한다.

성 구청장은 3차에 걸친 심사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직부문'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 기본과 원칙을 지켜 조직 내 부패요소를 없애고 효율적 행정을 구현했다는 평이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36498>

3. 전기안전공, '케스코 준감사인대회' 개최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실은 16일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본사 소통홀에서 '케스코(KESCO) 준감사인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준감사인대회는 공사 산하 전국 60개 사업소별로 각 한 명씩 우수 간부를 추천받아 준감사인으로 위촉하고, 사업소 자체 일상감사와 청렴동아리 운영 등의 반부패, 청렴활동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지난 2011년 감사 혁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처음 시행한 준감사인 제도는 당시 전국 공공기관 가운데 공사가 가장 먼저 도입, 감사원으로부터 우수 사례로 선정되며 다른 공공기관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힌 바 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11616165055559>